

수영천변 계획도로 변경에 관한 청원 심사 보고

1991. 12.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청원인 성명 : 이학수의 283인

주소 : 부산시 남구 망미2동 213-51 (1/5)

나. 소개 의원 : 김영우 의원

다. 접수 일자 : 1991. 11. 6.

라. 회부 일자 : 1991. 11. 11.

마. 상정 일자

○ 제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1991. 11. 12)

- 수영천변 계획도로 변경에 관한 청원 상정
- 전문위원 검토 보고
-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청원인 의견 진술의 건

○ 제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1991. 11. 13)

- 도시정비과장 현황 설명
- 청원인 의견 진술
- 질의, 답변,
- 현지 확인의 건

○ 현지 확인 및 자료 수집('91. 11. 14-11. 17)

○ 제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91. 11. 18)

-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

○ 현지 확인 및 자료 수집, 의견서 작성('91. 11. 20-11. 29)

○ 제7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91. 11. 30)

- 의견서 채택, 최종의결

2. 청 원 요 지

- 1986년 건설부 고시 제155호 및 1988년 부산직할시 고시 제379호로 지적 승인된, 수영천변 강변도로 확장(기존 15m에서 30m) 결정 고시에 의거,
- 15m 추가 확장도로가 하천부지쪽이 아닌 주택가쪽으로 개설될 시에는 300여세대 철거민 이주에 따른 보상비, 이주대책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 또한 각종 허가 규제등으로 주민이 재산상, 정신상의 큰 손해를 입게 되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주변에 무허가 판자집, 공장등의 난립으로 생활오수 및 공장 폐수로 인해 수영천이 크게 오염되고 있고,
- 부산시에서 강폭을 이유로 주택지쪽으로 계획선을 확장한다 하였으나 (주)대우에서 택지사용을 위해 수영강쪽으로 수천평이상의 매립지를 조성한 사실과 비교해 볼때 강폭과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되며,
- 아울러 계획도로 수정 불가시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찬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의 소요가 예상되고 있고,
- 상기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를 분석해 볼때 15m 확장도로는 주택지가 아닌 하천부지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

3. 취지 설명 요지

(취지설명 김영우의원)

- 지난 9월 4일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 질문에 도시국장의 답변은 수영천 전문설 계용역업자인 용역기관에서 수립한 하천폭 유지등의 이유로 변경이 실제 어려운 실정이며, 시에 자료 제출등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 현 수영천변 계획도로는 본의원이 알기로 1986년 도시계획에 의거 수영천변 강변도로 15m 확장이 하천부지쪽이 아닌 주택가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 주택가쪽 300여세대의 철거민 이주에 따른 보상비, 이주대책비 지급 등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 각종 허가 규제등으로 주민이 재산상, 정신상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며, 또한 현재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주변에 무허가 판자집, 공장등이 난립, 생활오수, 공장 폐수가 마구 버려져 수영천이 크게 오염되고 있고,
-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마저 위기를 맞고 있는 매우 절박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 그러나 여러차례 주민의 연명으로 부산시에 제출한 진정서의 회신내용은,
- 한결같이 강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하천부지쪽이 아닌 주택지쪽으로 추가 15m 확장도로 계획선을 확장하였다고 주장했는데,
- 이것은 주식회사 대우에서 택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수영강쪽으로 만여평이상의 매립지를 조성 완료한 사실과 비교해볼 때 강폭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찬,
- 이지역 주민들이 이 계획도로의 수정이 불가할 경우 집단으로 인한 소요가 일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상기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를 분석해 볼때 본위원은 15m 추가 확장도로는 주택지가 아닌 하천부지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빨리 수영천변 계획도로를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4.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무상)

- 먼저 그동안 주민이 제출한 진정 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산시 남구 망미2동 209및 213번지 수영천 강변도로 확장(기존 15m에서 30m) 결정 고시(1986. 12. 2 건설부 고시 제535호) 및 지적고시(89. 12. 29. 부산직할시 고시 제379호)로 지적 승인 고시된 수영천변 확장도로가 계획됨에 따라,
- 이 지역에 거주하는 망미2동 주민 300여세대는 이의 부당성을 지적, 여러차례 부산시를 포함 관계기관에 계속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회신 내용은 한결 같이 수영천이 수영강 하천 정비 계획에 의해 하천구역 결정및 지적승인고시(부산직

할시 고시 제134호, 83. 6. 1)되었으며 또한,

- 본 계획도로는 위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천구역밖으로 도시계획결정및 지적 승인 고시(부산시 고시 제379호, 88. 11. 29)되었고,
- 하천정비계획은 강우시 유출면적의 유출량을 근거로 계획 홍수량, 계획홍수위와 하폭, 하상계획등을 검토하여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수영천의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만 주민들에게 되풀이 해오고 있습니다.
-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한 점인 수영천 주변 매립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 동래구청 건설과에서 주관, (주)대우에서 시공하고 있는 온천천 직강공사(수영천옆 소재 동래구 경계지역)을 실시했는데 그 내용은,
- 온천천의 유로를 수영천으로 변경하고 온천천을 매립, 2만3,700평을 확보하여 온천천 직강공사 금액인 195억 만큼, 매립지 부지중 1만6,900평 범위내에서 주식회사 대우에서 배당받고, 배당하고 남은 부지 6,800여평은 수영 하수처리장 2차 부지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진정개요및 매립 경위를 놓고 분석해 보는데,
- 당시 부산시에서는 '81. 9-10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건설개발원 (대표 이선근)에, 수영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 그 결과에 의거 '91. 11월 부산직할시 하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확정된 하천기본정비계획에 따라 계속된 진정서의 회시 내용인, 계획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도, 부산시 하천심의 위원회의 종합적인 기술, 검토 결과이므로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한 시 치수과 주장인 대우 매립지역은 하천기본정비계획의 강폭과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매립지 이외의 지역에만 강폭과 연관이 있다고 한 그 내용은 매립지역을 전제로 한 주민요구 사항과 정면 배치된다 할 것입니다.
- 더불어 이지역 300여세대의 주민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 막대한 보상으로 예산 낭비 환경오염등을 이유로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의 뜻도 상당한 타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 상기와 같이 여러가지 이유를 최종 종합 분석 검토한 결과, 저의 의견으로는 (주)대우의 매립지 조성등 여건이 변한 현재 10년전의 하천기본정비계획을 계속 수용, 고집할 것이 아니라 관련 주민에게 최대로 피해를 축소시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 시당국에서는 조속히 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용하여 전문용역 기관과 관계공무원이 전반적으로 정밀 재검토및 각계각층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질의, 답변 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이계일의 원	도시국장 심대섭	○ 수영천변 계획도로 변경 청원에서 하천부지 매립전에는 부산시와 건설부에서 확정된 계획이 맞는데 매립후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 대우에서 매립한 지역은 원래의 지형형태 그대로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었음.
이태흠의 원	〃	○ 도시계획시설 기준의 제10조 제5호에 의하면 도로공사시에는 도로공사 비용이전 보상비등을 결정해야 하며, 지형지물을 가급적 활용하여야 되어 있는데, 수영천변 도시계획선은 정반대의 결론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물론 제10조에 준해져 있는 도로선형을 고려하고 가능한 지장물을 피하고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 또한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여러가지를 검토하면서 시행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도로선이라는 하나의 선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계획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재득의 원	〃	○ 도시계획선이 주택지쪽이 아닌 하천쪽으로 변경 시행하면 보상비가 적게 들고 빨리 시행할 수 있으며 또한 청원의 취지에도 합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때 견해는	○ 도시계획선을 정할때는 몇몇 공무원이 앉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이 장·단점 논의등 충분한 검토를 한후, 결정하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결론을 내릴수 없는 어려운 입장임.

이재득 의원	도시국장 심대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없는 하천부지가 많음에도 하천쪽이 아닌 주택지쪽으로 확정 시행될 시 2km나 되는 개인사유지의 건물철거에 따른 많은 보상이 필요할 것이며, ○ 또한 많은 보상비로 인해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광안리 해수욕장 앞 해안도로와 같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비교해 볼때 부산전체의 교통을 원활히 소통시키고 그리고 국고의 손실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현실성있는 견해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전에 도시계획선을 확정 시행했으면, 조그마한 공사비로 공사가 가능할 것임(광안리 해수욕장앞 해안도로도 마찬가지임) ○ 그러나 도로 행정에서는 항상 현시점이 가장 중요하며, 현시점에서 살림살이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 또한 도로공사를 할려고 해도 예산이 있어야 하나, 어려운 시세정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며 이를 해결키 위해 ○ 부산시에서 수입증대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도시개발공사의 예)
김봉곤 의원	도시국장 심대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인의 설명에 의하면 2km나 되는 거리의 상부강폭은 240~240m이며 하부는 170m인데 거리상의 문제점도 있고 ○ 또한 하천부지로 도로가 계획될 경우에는 고지부지상 15m의 강폭이 줄어든다고 하였으나, ○ 금번 그레디스 태풍시에도 고수부지에 물이 잠기지 않는 것을 비교해 볼때, 고수부지상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왜 고수부지를 파낼려고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치수과에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만약 그레디스 태풍보다 더한 태풍으로 인해 수영천이 범람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현실정임을 감안, ○ 확실하고도 뚜렷한 기술적인 뒷받침없이 계획 변경하기는 어려운 형편임. ○ 도시국에서는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해결토록 적극 노력 약속

김봉곤 의원	도시국장 심대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인의 말씀과 같이 고수부지만 들어내면 물만 몇십만톤 더 고인다 뿐이지 강폭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되는데 ○ 왜 큰 어려움이 있어서 안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부서의 주장에 의하면, 고수부지를 남겨놓은 것은 홍수가 발생시 그 위에 면적을 넓힘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물이 안흘러가므로 해서 지반이 물을 받아줄 수 있다고 함. ○ 청원인의 말씀에 의하면 하부쪽 민락다리부분이, 현재 강폭보다 많이 좁으며 홍수가 났을 때 상부에는 넓으나, 하부가 좁아 무슨 효험이 있겠냐고 지적했듯이 이 부분도,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민락다리 새로 만들때 폭을 넓히는 문제등)
최진동 의원	도시정비 과장 이용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10년 전에 수립된 계획으로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독자적 용역을 의뢰, 그 결과에 의거 시에 건의하면 어떻겠느냐, ○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수영천변 하천부지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 현재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어 있는데 시행청은 어디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천변 도면에 의거 설명(회의록 참조) ○ 계획폭이 30m 도로로서 부산시에서 입안및 개설이 가능함.

이제일 의 원	건설과장 정진화	○ 부산시와 대우간의 매립과 관련 어떤 방법으로 계약 되었는지 여부	○ 대우에서 1만6,900평의 매립 공사 를 해주고, 공사금액 190억만큼 땅을 받게 되며, 공사는 '92년 10 월말 계획되어 있고, 계획이 변 경될지는 현재로는 미정이며, ○ 또한 대우에서 배정받는 땅의 위 치등은 부산시에서 결정할 것이 며, ○ 민자유치 문제는 부산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시행한 것임.
〃	도시정비 과장 이용웅	○ 건설부에서는 처음에는 변 경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 에 대한 견해는.	○ 건설부에서 안된다고 그런 답 변을 한적이 없으며, ○ 건설부 장관이 도시계획입안권자 인 부산시장이 처리할 사항이기에 부산시장으로 하여금 면밀히 처리 검토하라고 조치하였다고만 하였 음. ○ 본특별위원회에서 자료가 올라가 며 반드시 좋은 효과가 있을 것 임.
강정화 의 원	〃	○ '86년 지적고시 미필로 되어 있다가 '89년 9월 결정고시가 이루어졌는데, 충분한 공람이나 주민들의 공청회와 공시가 있어야 함에도 공청회와 공시를 하지 않았고, 청원인의 말 씀처럼	○ 15m에서 30m로 변경 결정고시가 처음이며 결정고시로부터 2년내 지적고시가 되었으며,

		○ 신문 귀퉁이의 광고로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무작정 수용해야 되는지.	○ 지적고시이후 지방지나 중앙지 일간지에도 2회이상 공람, 공고등 법적절차는 시에서는 반드시 했을 것임.
		○ 고수부지에 준설을 해보았 자 큰 효과는 있는지.	○ 기술적인 문제로 여기에서 깊이 거론이 못할 사항으로 판단됨.
		○ 대우가 시공하는 매립지는 사유지인지 아니면 공부상 대우의 소유인지	○ 온천천 직강공사(매립지 공사)금액 (195억원)만큼 주식회사 대우에서 매립지땅을 인수할 것이며, 어느 정도 땅인가는 공사후 정산을 해 보아야 할 것임.
박호상 의 원	도시국장 심 대 섭	○ 15m 추가도로를 평지가 아닌 다리를 놓아서 시행 하면 안되겠는지.	○ 도면상으로 보면 물이 회선해가는 곡각 지점으로서, 물을 받아 주는 지점이기도 하며, 물론 구조상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함.
		○ 주민공청회를 해야할 필요 성이 있다고 보는데,	○ 요즈음은 구청에서는 공청회도 반드시 하며, 또한 이해관계자 되신분을 모아 설명도 합니다.
			○ 당시에 공청회를 했는지는 속단을 못하겠지만 공청회를 하지 않았 다고 생각이 듦.
		○ 주민공청회를 해야할 필요 성이 있다고 보는데,	○ 요즈음은 구청에서는 공청회도 반드시 하며, 또한 이해관계자 되신분을 모아 설명도 합니다.
			○ 당시에 공청회를 했는지는 속단을 못하겠지만 공청회를 하지 않았 다고 생각이 듦.
		○ 대우에서 매립한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폭과 관련 된 현황을 설명 요망	○ 동래구청 소관으로서 확인을 해서 폭과 밑의 하천폭하고 연관을 시 켜서 상세한 폭을 알아보겠음.

이태훈 의원	도시국장 심대섭	<p>○ 수영천변 계획도로에 관한 아래의 청원 관계 기본자료 12종류에 대하여 수집 방법 설명 요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회사 건설개발원과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서 2) 주민공청회 회의 서류 3) 부산시와 주식회사 대우와의 계약서와 공사 내역 4) 공청회 개최 2회 일간지 사본 5) 부산대학 기술연구소에서 검토한 수리 모형 검토 결과 6) 결정고시 당시 도시계획 위원회회의록 7) 동래구청에서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주식회사 대우에서 시공하고 있는 온천천 직강공사 실시 내역서 및 계획서 8) 결정고시 당시 구청의견 9) 수영천변 계획도로 확인원 및 토지대장, 하천부지에 대한 토지대장 10) '89년 7월 1일자 1차 진정에 대한 건설부가 부산시장에게 앞으로 검토 조치하도록 위임한 문서 사본 	<p>○ 구에서 제출할 자료는 한두가지 정도이고, 열가지 정도는 본청이나 동래구청에 자료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나 최대한 자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자료 수집에 협조할 것을 약속.</p>
-----------	-------------	--	---

		11) '91. 11. 9일자 본청 건의 사본	
		12) 계획선 변경 추정 금액 차액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소위원회 미개최

8. 심 사 결 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9. 의 건 서

“ 별 첨 ”